

- ▷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재난대응 관계부처 및 시도 합동회의
- ▷ 야외행사 행사시간 조정·단축, 마스크 지급 등 적극적 조치 요청

□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관계부처와 시도 합동 긴급 재난대응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 및 부처 관계자들은 각 시도의 사업장과 공사장 배출저감 조치, 도로청소 확대 등 비상저감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, 국민건강 보호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오늘(1월 4일) 위기경보 '관심 단계' 및 '비상저감조치'가 발령된 5개 시도 (충남·충북·세종·전북·광주광역시)와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 등 11개 관계 부처에서 참석했다.

※ 11개 부처: 교육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국무조정실, 산림청

□ 조 장관은 각 기관별로 재난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, 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하며, 기관장 등 간부들이 현장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.

○ 또한, 조 장관은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주말에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 불편이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다 세심한 상황관리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.

○ 특히, 지자체에는 각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겨울철 축제나 실외 스케이트장 운영과 같은 야외행사와 관련하여, 행사시간 조정·단축이나 마스크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.

□ 한편, 조 장관은 관계기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긴장감 유지를 주문했다.

○ 이번 사례와 같이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다.

○ 조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개선될 때까지 움직이는,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.